Ⅱ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및 편의성 제고

1.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19
2. 지급수단 편의성 제고 22

1.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자금이체 관련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
- 디지털 뱅크런 발생에 대비한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 오픈뱅킹공동망 안전성 강화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한국은행은 소액결제시스템의 자금이체 한도 관련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30%에서 100%로 인상하는 계획을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다만 동 비율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참가기관의 담보부담이 일시에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상 시기를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10월 국내 단기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담보제공비율 인상조치 유예,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의 한시적 확대[1] 등을 포함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담보제공비율의 경우 인상 일정을 3개월씩 순차적으로 연기했다(100% 납입시기: 2025.2월 → 2025.5월). 이후 금융시장 불안 지속 등으로 2023년 1월 동 조치의 종료기한을 다시 연장하면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 인상시점을 추가 순연했다(100% 납입시기: 2025.5월 → 2025.8월).

그 결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2023년 8월 70%에서 80%로 인상했으며 2024년 8월에는 90%로, 2025년 8월에는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

표 II-1.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1] 인상 일정

(%)

	기존	2023.2	2023.8	2024.2	2024.8	2025.2	2025.8
변경 전[2]	70	80	80	90	90	100	100
변경 후[3]		70	80	80	90	90	100

주: 1) (Σ담보인정가액 / 순이체한도)×100
2) 2022년 10월 시장안정화 조치 실시 전 기준
3) 2023년 1월 인상시기 변경 이후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의 경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뱅킹 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2023년 4월 담보 포괄범위의 한시적 확대조치의 종료기한을 추가 연장(2023.4월 → 2023.7월)했으며 2023년 7월 대출제도 개편[2]을 통해 포괄범위 확대를 상시화했다. 한시적으로 인정하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 및 은행채를 상시 적격담보증권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및 우량회사채를 포괄범위에 신규로 추가하는 등 예금취급기관이 납입할 수 있는 담보증권을 다양화함으로써 담보 납입 부담을 경감했다.

1) 기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범위에 한국전력공사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은행채권)를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2) 한국은행은 2023년 7월 27일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동 개편방안은 은행에 대한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하향조정 및 적격담보 범위 확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대출채권의 적격담보 포함방안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2023.7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II-2.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 확대[1)]

적격담보증권	변경내용
·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주택금융공사 MBS,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	—
·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은행채권)	상시화
·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회사채	신규 추가

주: 1) 2023.7월 대출제도 개편 시 발표
자료: 한국은행

디지털 뱅크런 발생에 대비한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2023년 3월 9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에서는 8시간 동안 총 예수금의 25%에 해당하는 약 420억 달러의 예금 인출 요구[3)]가 발생하면서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SNS상 빠른 정보확산이 용이해진 데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보편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미국 역사상 규모와 속도 면에서 가장 심각했던 뱅크런 중 하나였다.[4)]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뱅크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재무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대규모 자금이체 및 예금인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자금이체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이체 관련 업무수행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기존에는 예금취급기관이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중에만 담보납입을 통해 자금이체 한도[5)]를 증액할 수 있었지만, 필요시 야간 및 휴일 시간에도 자금이체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예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금고 등 일부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서민금융기관 고객의 예금인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의 자금이체 한도가 고객의 예금인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인지 사전 점검하고 자금이체 한도 증액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이체업무 수행 시 고객 불편이 없도록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이체 수행 규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적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3) 3월 9일에 360억 달러만 인출되었고, 나머지 60억 달러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출되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Review of DFPI's Oversight and Regulation of Silicon Valley Bank」(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 2023.5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4) 자세한 내용은 「Understanding the Speed and Size of Bank Runs in Historical Comparison」(Jonathan Rose, Economic Synopses No.12, FRB of St. Louis, 2023.5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5) 인터넷뱅킹, 타행환 등을 처리하는 금융결제원 소액지급시스템은 송금인의 자금이체 신청 시 수취인 계좌에 바로 입금(인출가능, 선지급)되는 반면 이에 따른 은행 간 결제는 다음 영업일 지정시점(11:00)에 완료되는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지급 방식은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지만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차액결제 시점까지 수취인에게 지급한 자금을 송금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자금이체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동 한도에 연동된 사전담보를 납입토록 함으로써 신용리스크를 제거하는 등의 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픈뱅킹공동망 안전성 강화

오픈뱅킹[6]공동망은 핀테크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조회 및 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 8월 구축되었다. 이후 빅테크 기업에 대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이 허용[7]되면서 핀테크를 통한 지급서비스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자금이체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오픈뱅킹공동망을 중요한 소액지급시스템으로 판단하고 동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2023년 11월 오픈뱅킹공동업무 규약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오픈뱅킹공동망 이용기관[8]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비하고 정기 재심사를 의무화했다.[9]

세부적으로 보면 오픈뱅킹공동망의 이체업무 및 조회업무 이용 자격기준을 체계화하여 은행,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오픈뱅킹공동망 참가기관, 전자금융업자 및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은 이체 및 조회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조회업무만 수행할 수 있게 했다.[10] 이와 함께 오픈뱅킹공동망 이용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매년 이용기관의 이용자격, 이용 적합성, 보안기준 충족 여부 등을 재심사하도록 의무화했다.

표 II-3.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업무별 자격기준

이용업무	자격기준
이체 및 조회 업무	· 오픈뱅킹공동망 참가기관[1] ·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 ·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 ·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모델[2]을 영위하는 것으로 금융결제원 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조회 업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핀테크산업 분류 업종 · 기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주: 1) 은행,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2)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 보호체계를 갖추거나, 사용자 본인 계좌 간 이체 등 이체대상이 제한된 경우

한국은행은 앞으로 정기평가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재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QR BOX

QR 1

보도자료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6)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 등이 고객의 명시적 동의하에 오픈 API를 통해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에 접근해 지급서비스 및 금융정보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7) 2016년 오픈뱅킹공동망 도입 당시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 베드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이용기관을 자본금 20억 원 미만의 중소형 핀테크 기업으로 한정했다. 2019년 12월 핀테크 혁신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동 제한을 폐지했다.
8) 은행·금융투자회사·카드사 등 참가기관, 전자금융업자,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 전자금융업 미등록 핀테크 기업 등이다.
9) 「III.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국내외 협력 강화 > 1.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 및 복원력 제고 >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및 개선 권고」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금융결제원은 동 요건을 충족하진 못하지만 현재 이체업무를 이용하는 전자금융업 미등록 핀테크 기업 등 이용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연속성을 위해 이체업무 이용을 허용하되 조속히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 지급수단 편의성 제고

- 공동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개시
- 금융맵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 금융포용 관점에서 현금 이용 접근성 유지 노력

공동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개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11](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는 2023년 12월 6일 금융결제원 및 17개 국내은행과 함께 모바일현금카드[12] 기반 공동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를 개시했다. 동 서비스의 도입으로 실물 현금카드 없이도 스마트폰 내 모바일현금카드 공동 앱이나 일부 개별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기종이나 거래은행에 대한 제한 없이 은행권 ATM에서 현금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ATM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일부 기술적·제도적 제약으로 범용성이 떨어져 고객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모바일현금카드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접무선통신(NFC) 기능이 탑재된 ATM에 한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그리고 개별은행의 뱅킹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은행의 ATM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타행 ATM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2022년 12월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금융결제원, 참가은행 등과 함께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2023년 12월 우선 은행권 ATM[13]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여 고객들은 17개 은행 ATM에서 스마트폰 기종의 제한 없이 모바일현금카드 공동 앱[14]이나 일부 개별은행 모바일뱅킹 앱만으로 편리하게 현금 입·출금거래[15]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II-1. 모바일현금카드 앱 및 ATM 이용 화면(예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11)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7>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는 가맹점 수수료 절감, 금융·결제서비스 모바일화 대응 및 신용카드 등 고비용 지급수단에 편중된 지급결제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은행권 공동사업으로 2020년 6월 도입했으며 ① CD/ATM 거래, ② 상거래 대금결제(직불결제), ③ 가맹점에서의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 2022년 말 기준 국내 CD/ATM 대수는 11.6만 대 수준이며, 은행권 4.9만 대, 자동화기기사업자 5.1만 대, 서민금융기관 등 1.6만 대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14) 모바일현금카드 공동 앱은 ATM 및 은행 지점의 위치정보, 이용 수수료, 장애인 지원 기능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금융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CD/ATM 거래 시 함께 사용하면 편리하다.
15) 모바일현금카드를 이용한 ATM 입·출금 건수는 안드로이드 이외의 스마트폰 이용 고객 유입, 서비스 도입 홍보 활동 등으로 2023년 11월 중 총 1,210건에서 12월 중 14,791건으로 큰 폭(1,122%) 증가했다.

앞으로 공동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서비스를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 자동화기기 및 서민금융기관 운영 ATM에도 확대 적용하고, 개별은행 모바일뱅킹 앱 및 민간 페이 앱과의 연계를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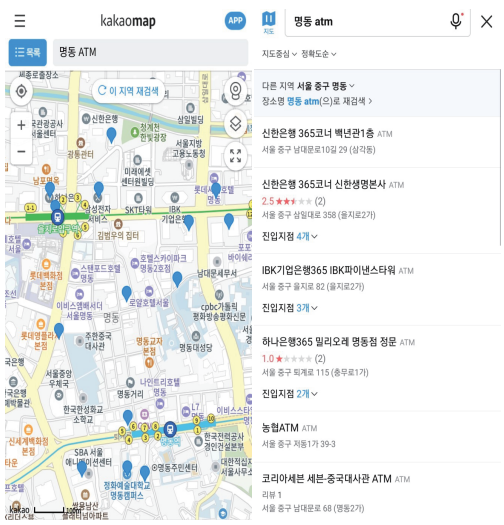
아울러 모바일현금카드의 결제 편의성도 신규 가맹점 확보, 불편한 결제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금융맵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권과 공동으로 2021년 11월부터 ATM 및 금융기관 지점 위치 정보 등을 통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맵 서비스[16]를 제공해왔다.

2022년 12월 금융맵 서비스의 정보 제공 채널을 금융결제원의 관련 앱[17]에서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국내 주요 지도플랫폼인 네이버지도, 티맵, 현대기아차 네비게이션으로 확대했다. 2023년 9월에는 정보제공채널에 카카오 맵도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의 ATM 및 금융기관 지점 이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그림 II-2. 민간 지도플랫폼에서의 ATM 정보 검색 화면 (예시)



<지도형> <목록형>

자료: 카카오맵 앱

금융포용 관점에서 현금 이용 접근성 유지 노력

현금은 누구나 낮은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유·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금융포용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현금의 수용성이나 접근성이 저하될 경우 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저소득층 등 일부 금융 취약계층의 소비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결제 거부 경험[18], ATM 설치대수[19] 등을 볼 때 현 시점에서 현금 수용

16) 금융권 ATM 및 금융기관 지점 위치 정보, 운영시간, 제공서비스(입·출금, 통장거래, 현금서비스, 모바일현금카드서비스, 공모주 청약 등), 수수료, 지원 언어, 장애인 지원기능(점자표시, 휠체어 공간, 화면확대, 이어폰잭 등), 지점 폐쇄 예정 및 대체지점 등이 포함된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

17) 금융맵 앱, 모바일현금카드 공동 앱, 어카운트인포 앱 등이 있다.

18)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현금결제 거부를 경험한 응답자 비중이 6.9%(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조사, 2022.6월)로 영국(약 35%), 스웨덴(약 37%), 호주(약 30% 이상)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성인 기준) 10만 명당 ATM 설치대수(2020년 기준)는 259.5대로 영국(98.8대), 프랑스(93.5대), 독일(79.5대), 일본(121.3대), 호주(129.7대) 등 주요국 및 OECD 평균(66.8대)을 상회하고 있다.

성 및 접근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으로 현금 사용 감소세가 지속[20]될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현금 수취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거나, 화폐유통시스템 참가기관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현금 이용 관련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현금의 수용성 및 접근성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화폐유통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현금사용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21]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소매·유통업체 등과 화폐유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금사용 선택권[22] 보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중에는 홍보 포스터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대중교통, 온라인 등에 게시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폐사랑콘텐츠 공모전[23]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했다. 또한 현금없는 매장 실태, 해외 주요국 사례 등 현금 수용성 및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금융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그림 II-3.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포스터

자료: 한국은행

20)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 이용 추세에 대해서는 <참고 II-1>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국내 화폐유통시스템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2년 8월 구성되었으며, 참가기관은 공급자(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중개자(금융기관 및 현금수송회사 등)·사용자(소매·유통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유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총 23개 기관이다.

22)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은 소비자의 지급결제수단 선택 시 현금을 배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덴마크, 프랑스, 미국(일부 주 또는 시) 등 주요국은 입법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23) 2023년에는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위조화폐 유통 방지, 돈 깨끗이 쓰기, 동전 다시 쓰기를 주제로 동영상 및 카드뉴스를 공모했으며, 접수된 135편의 응모작 중 10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센터 - 공모 수상작'의 '화폐사랑콘텐츠(동영상)'와 '화폐사랑콘텐츠(카드뉴스)'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II-1.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동향

어음·수표

2023년 중 어음·수표 이용규모(일평균)는 전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24.8%, 금액 기준으로 6.6% 감소했다. 이는 5만원권 이용 증가[1], 전자지금수단 사용 확대 등에 기인한다.

어음·수표 이용규모[1](일평균)

(천 건, 십억 원, %)

		2021	2022	2023	증감률
건수	자기앞수표	259	224	166	-25.8
	정액권	223	186	134	-28.1
	(10만원권)	145	114	76	-33.4
	비정액권	36	38	33	-14.4
	어음 등[2]	10	9	9	-5.6
	전자어음	6.5	6.0	5.9	-2.3
	기타증서[3]	1.6	1.6	1.6	0.8
	합 계	271	235	177	-24.8
금액	자기앞수표	1,206	1,244	1,075	-13.5
	정액권	92	83	65	-21.7
	(10만원권)	14	11	8	-33.4
	비정액권	1,114	1,161	1,010	-13.0
	어음 등[2]	15,008	12,717	11,292	-11.2
	전자어음	3,886	2,133	2,127	-0.3
	기타증서[3]	2,686	2,701	3,188	18.0
	합 계	18,900	16,662	15,555	-6.6

주: 1)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교환제시 금액, 창구제시 금액 및 전자어음 포함
2)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환어음, 전자어음 포함
3) 우편환증서, 유가증권원리금영수증 등
자료: 금융결제원

계좌이체

2023년 중 계좌이체 규모(일평균, 타행이체, 한은금융망 제외)는 전년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10.4%, 금액 기준으로 1.0% 증가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는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펌뱅킹의 이용 증가세가 둔화되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2]

계좌이체 이용규모(일평균)

(천 건, 십억 원, %)

		2021	2022	2023	증감률
건수	입금이체[1]	21,363	23,707	26,434	11.5
	전자금융공동망[2]	19,041	21,333	23,938	12.2
	(인터넷뱅킹[3])	10,934	12,132	13,639	12.4
	(펌뱅킹[4])	7,077	8,205	9,209	12.2
	타행환공동망	254	238	231	-3.1
	출금이체	10,604	11,896	12,871	8.2
	합 계	31,967	35,604	39,305	10.4
금액	입금이체[1]	85,656	89,799	90,393	0.7
	전자금융공동망[2]	78,757	83,473	84,283	1.0
	(인터넷뱅킹[3])	37,407	38,293	39,521	3.2
	(펌뱅킹[4])	30,364	33,793	34,163	1.1
	타행환공동망	5,504	4,885	4,622	-5.4
	출금이체	1,496	1,988	2,297	15.5
	합 계	87,152	91,787	92,690	1.0

주: 1) 한은금융망 계좌이체 제외
2) 타행이체 기준
3) 모바일뱅킹 포함
4)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용 금융거래시스템
자료: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지급카드

2023년 중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전년대비 건수 기준으로 6.7%, 금액 기준으로 5.9% 증가했다.

1) 2023년 중 5만원권 환수율(환수/발행)은 67.1%로 2018년(67.4%, 역대 최고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상거래에서 5만원권의 이용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3> '최근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 증가세 둔화 배경'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급카드 종류별로 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전년보다 각각 8.0%, 6.5% 증가했고, 체크카드의 경우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5.2%, 4.5% 증가했다. 다만, 민간소비 회복 모멘텀이 약화[3]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폭은 축소[4]되었다. 선불카드는 전년대비 건수 기준으로 36.6%, 금액 기준으로 33.3%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이 상당 부분 종료된 데에 기인한다. 기타 카드는 직불형 현금카드 이용 확대[5]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했다.

지급카드 이용규모(일평균)[1]

(천 건, 십억 원, %)

		2021	2022	2023	증감률
건수	신용카드	42,044	46,400	50,097	8.0
	체크카드	24,163	26,271	27,648	5.2
	선불카드	504	565	358	-36.6
	기타[2]	189.5	216.9	276.8	27.6
	합 계	66,900	73,453	78,379	6.7
금액	신용카드	2,312	2,611	2,780	6.5
	체크카드	581	637	666	4.5
	선불카드	12.6	14.5	9.7	-33.3
	기타[2]	2.8	3.3	4.5	37.6
	합 계	2,909	3,266	3,460	5.9

주: 1) 개인 및 법인(국내외 가맹점) 기준
2) 현금카드 및 직불카드
자료: 전업카드사 및 겸영은행, 금융결제원

지급방식별로는 대면지급 이용금액이 전년대비 6.6%, 비대면지급 이용금액이 5.6% 증가했다. 특히 대면지급 방식에서 모바일기기 등을 결제단말기에 접촉하는 방식이 실물카드를 이용한 방식보다 편의성 측면에서 크게 선호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증가세[6]를 이어갔다.

지급카드[1] 지급방식별 금액(일평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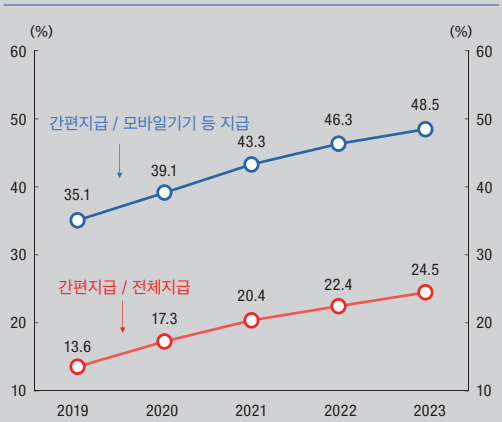
(십억 원, %)

	2021	2022	2023	증감률
대면지급	1,470	1,645	1,755	6.6
(실물카드 제시)	1,314	1,416	1,443	1.9
(모바일 기기 등 이용)	156	229	311	35.7
비대면지급	1,011	1,101	1,163	5.6
합 계	2,481	2,746	2,917	6.2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2) 개인 및 법인(국내 가맹점) 기준(잠정치)
자료: 전업카드사

한편 모바일·PC 등을 이용한 대금 지급 중 간편 지급서비스[7]를 이용하는 비중은 높은 편리함 등으로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카드기반 간편지급서비스 이용 비중[1][2]



주: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준
2) 개인 및 법인(국내 가맹점) 기준(잠정치)
자료: 전업카드사

3) 민간소비 증감률(명목기준) : 2021년 6.2% → 2022년 8.7% → 2023년 5.3%(잠정)
4) 2022년 중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021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 9.8%, 금액 기준으로 12.3% 증가했다.
5) 현금카드 이용금액(일평균) 증감률 : 2021년 24.6% → 2022년 14.6% → 2023년 37.6%
6)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대면지급 이용금액(일평균) 증감률 : 2021년 29.9% → 2022년 46.9% → 2023년 35.7%
7) 지급카드 등의 중요 정보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에 미리 등록해두고 거래 시 간편인증수단(예: 비밀번호, 지문·얼굴 등 생체정보)을 이용해 재화·서비스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참고 II-2.

지급결제 환경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그간 금융권에서의 AI 기술은 주로 고객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는 신용평가 및 대출 심사 업무나 고객 대응력 강화를 위한 챗봇 서비스 등에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 상품·서비스 구매과정에서의 지급 편의성 제고, 결제리스크 관리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도 AI 기술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지급결제 환경 관련 AI 활용 분야

지급결제 관련 단계	AI 활용 분야	
1 고객의 지급수단 선택	고객 혜택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급수단 추천	
2 고객 본인확인 및 인증	바이오 정보(얼굴, 정맥, 홍채, 지문, 음성 등)를 통한 인식 및 인증 개선	
3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거래 처리	이상거래 탐지	사기·범죄 등 부당결제 예방
4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거래 처리		잠재적인 뱅크런, 사이버공격 등 리스크 관련 조기 탐지 및 대응
5 중앙은행 지급결제제도 총괄 관리·감시		

자료: 한국은행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지급결제 환경 구축을 위해 향후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할 때 전자지갑에 있는 다양한 보유 지급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충전금 등) 중 소비자에게 가장 혜택이 많을 수 있는 지급수단을 추천해주는 데 AI가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얼굴·정맥·음성 등 다양한 바이오 정보를 통해 사용자를 인식하고 인증하는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속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점 내 카메라를 통해 고객 얼굴과 고객이 선택한 상품을 인식하여 고객이 매장을 나올 때 등록된 지급수단으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스마트편의점 등에 활용되고 있다.[1)]

셋째, 사기·범죄 등 부당결제 예방 등을 위해 현재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이상거래 탐지 기능을 한층 고도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비정상 거래 패턴 등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데 있어 정형화된 규칙 기반(Rule-based) 방식에 의존해왔지만, AI 기술을 활용하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정교하게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2)]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 부문에도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은 이상거래를 식별하여 잠재적인 뱅크런, 금융사기 또는 사이버공격과 같은 문제를 조기에 대응하는 데 AI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3)]

이처럼 AI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실제 환경에서의 AI 활용사례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비자 지급 편의성 제고,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AI 기술은 개인정보보호, 기술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 위험성도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 및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국내 일부 편의점도 스마트편의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객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직접 바코드를 찍고 지급수단을 선택하여 스스로 계산해야 하는 무인 편의점과 달리 고객이 물건을 골라서 출구로 나오면 사전 등록된 결제 수단을 통해 자동결제된다.

2) Mastercard는 사기 거래 유형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응하여 결제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Decision Intelligence Pro 시스템을 개발했다. 동 시스템은 사기 거래 발생 시 이를 탐지하는 능력이 기존 초기 모델 대비 최대 30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Mastercard의 「Mastercard supercharges consumer protection with gen AI」(2024.2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3) 자세한 내용은 BIS의 「Artificial intelligence in central banking」(2024.1월)을 참조하기 바란다.